

한국 언론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대안 모색

박종균 (부산장신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공론장으로서의 언론과 한국 언론의 신뢰 상실

1. 언론의 공론장
2. 한국 언론의 신뢰 상실과 공론장의 붕괴

III. 제도언론과 공론장 회복

IV. 대안언론과 공론장 회복

V. 나가는 말

• ABSTRACT •

An Ethical Introspection on Korean Journalism's
Incredibility and its Alternative Efforts

Park, Jong-kyunn

In this study I argue that the phenomena of journalistic incredibility in this society are deeply related to the crisis of democracy the crisis of our democracy, and suggest the normative aspects that journalism should not evade in order to strengthen this vulnerable democratic situation. Preferentially, this study understands the concept of J. Habermas' "public sphere"(Öffentlichkeit) from the perspective of journalism and considers the trust-loss of journalism in the context of the collapse of public sphere. The incredibility of journalism needs to be viewed in the association of the social context of what is called democracy. So this research examines the brief history of the collapse of public sphere of journalism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tization. And then this study deliberates normatively how to secure the public sphere for the purpose of credibility of Korean journalism. To the end,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right' ethic and 'good' ethic. The former shows us how journalism should do its roles for democracy, while the latter tells us what journalism does. The right journalism puts more importance on procedural justice in the 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while the good journalism does much gravity onto the performance of public virtue for the society. Based on the norms of 'right' and 'good', this research continues to come up with some practical ways for the recovery of public spheres. In other words, Korean journalistic credibility by the way that we surveys the theory of Habermas' public sphere and alternative journalism's public sphere respectively.

Key words: Journalism, Incredibility, Habermas, Public Sphere, Alternative Journalism.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가 처한 최근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언론과 민주주의는 필요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언론의 본질은 소통이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수용하고, 미디어를 이용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언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용하는지에 따라 우리 자신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법과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민주주의 핵심인 시민을 ‘공중’으로 길러내는 사명을 지니기도 한다. ‘공중’이란 ‘자신의 문제점을 생각할 줄 알고, 그 문제점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민’을 말한다. 언론이 공중을 길러내지 못하고 공중의 삶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신문이나 방송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며, 언론이 없다면 시민들이 ‘공중’의 형태로 형성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¹⁾

오늘날 한국의 언론은 정보화 사회에 진입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폭발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시민은 언론의 소비자로서 언론이 만들어낸 정보를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공중으로서의 시민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스러운 현실이다. 공중으로서의 시민이 적고, 결과적으로 공공의 삶이 피폐해져가는 민주사회란 그 자체로 언론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위기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구조적, 체계 내적 모순을 통해 야기되며, 이 모순에 처한 시민들이 그들의 사회

1) Lewis Friedland, "Public Journalism and the New Information Commons," 부산경남언론학회, 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공동주최, "공공저널리즘과 미국의 지역 언론" 학술토론회 발표문, 2001, 6, 7. 참고.

적 정체성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위기를 인식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위기를 집단적인 경험으로 공유하길 바란다. 여기서 시민들은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소통을 필요로 하게 된다. 위기의식의 공유화에 이어 이들 위기의 인식자들은 그것을 공론화 내지는 여론화하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 요구된다. 언론은 시민들로 하여금 모든 공적인 사건이나 사안들에 관하여 알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고유의 관심사를 알릴 수 있는 장소이다. 다시 말해 언론은 공적 사안이나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공지하여 공적 의사소통의 주제로 만드는 장, 즉 공론장(Öffentlichkeit)이다.²⁾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는 언론이 스스로 공론장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데 있다. 스스로 자본권력이 되었거나 정치·경제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현재 한국의 언론권력이라 불리는 메이저언론은 불평등 상태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현 상태의 공고화를 위해 작동할 뿐이다. 조직화된 이익세력은 공적 의사소통과 정치적 의견 형성까지도 지배한다. 국가와 사회 사이에 기업 조직이나 이익집단이 끼어들면서 공론장은 더 이상 정당성도, 조정의 기능도 소멸되고 만다. 자본에 포섭된 언론은 비판적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으며, 이른바 공론장의 붕괴 현상을 맞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이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과 맞물려 접근할 것을 주장하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2) 하버마스는 자생적 만남의 장인 문에 공론장이 시민계급의 사회적·정치적 요구를 담아내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신문으로 대표되는 매체라 본다. 시민들은 공론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근대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한 주체가 될 수 있었고, 비로소 '여론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Jürgen Habermas,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Frankfurt: Suhrkamp Verlag, 1962), 92쪽.

한국 언론이 지향해야 할 규범적인 측면을 탐색해보려는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는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논하기 위해, 한국 언론의 신뢰 상실 현상을 진단하고자 한다. 우선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언론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한국 언론의 신뢰 상실의 현상을 공론장의 붕괴라는 맥락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언론의 신뢰상실은 반드시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맥락과 연관해서 조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전개 속에서 언론이 어떻게 공론장의 기능을 상실해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난후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언론이 신뢰 회복을 위해 지향해야 할 공론장의 확보를 규범적으로 숙고한다. 이를 위해 주목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옳음’의 윤리와 공공선적 가치수행을 중시하는 ‘좋은’의 윤리이다. 한편으로, 민주주의 사회란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원리 측면에서 서로 병존하고 화해할 수 없는 원리들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이기에 어떤 하나의 원리로 단일화 될 수 없다. 그렇기에 이런 다양성의 원리들의 서로 패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 즉 다원성과 합리성 그리고 정의로서의 ‘옳음’이 규범적 중요성을 갖는다. 다른 한편, 보편·추상적 방법론에 우선성을 두고 ‘옳음’의 규범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특수, 구체에 우선성을 두고 ‘좋은’과 가치가 규범적 중요성을 갖기도 한다. 여기서는 지혜가 도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공동체의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간의 우애와 신뢰가 공정성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옳음’과 ‘좋은’의 규범성에 기초하여 각각 하버마스의 공론장과 대안언론의 공론장 이론을 논의하고 그것에 기초해 한국의 언론회복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공론장으로서의 언론과 한국 언론의 신뢰 상실

2010년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³⁾ ‘방송법’ 제1조 역시 그 목적을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⁴⁾ 새로운 뉴스미디어들이 홍수를 이루는 오늘날 언론이 사회적 소통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수행하는 역할은 환경에 대한 감시(surveillance)⁵⁾,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권력 감시와 견제,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론장, 정치 및 사회과정에 참여 촉진 등에 있다는 주장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⁶⁾ 공공이익과 관련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언론의 공론장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매체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공론장은 언론에 의해 구축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은 공론장을 장악하고 여기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아젠다를 제시하거나 불리한 아젠다를 배제시키고 국민들의 동의나 무관심을 유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론장을 통해 권력집단을 감시하며, 공동체의 현안을 유도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역사적으로 언론의 공론장 역할에 대해 항상 의문이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의 공론장의 관리라는 공적 서비스 수행의 중차대성을

3) www.law.go.kr.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참고.

4) www.law.go.kr/법령/%20방송법 참고.

5) 환경감시의 기능이란 우리 주변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일들을 알려주는 사실 보도(straight news)로 통칭되는 기능을 말한다. 언론은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여론형성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준호, 『위기의 미디어와 저널리즘』 (서울: 탐구사, 2014), 38-39쪽.

6) 김영욱·김광호, 『뉴스미디어의 미래: 텔레파이 조사와 시나리오 기법을 통한 탐색』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13쪽.

인정했기에 민주사회에서는 언론에 대해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청구권, 면책특권, 보도방송 및 논평의 자유, 취재의 자유, 보급의 자유 그리고 편집·편성의 자유”와 같은 특혜와 법적인 보호 등의 장치를 마련했던 것이다.⁷⁾ 따라서 언론은 공론장에서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제시하는 한편, 공동체 구성원이 합리적이고 성숙한 판단을 하는데 꼭 필요한 공적 지식을 제공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시민들이 무기력한 수동적인 대중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적 사안들을 토론하고, 시민의 사회적 참여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와 문화 포럼, 즉 공론장을 주체적으로 확보하려는 공중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민주사회는 바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론장의 의미는 중차대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언론은 공론장 형성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언론의 신뢰성 상실은 공론장의 기능 상실과 동어반복이다. 여기서는 먼저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언론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언론의 신뢰 상실을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맥락과 연관해서 조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전개 속에서 언론이 정치권력과 어떤 상호작용을 수행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언론의 공론장 기능의 문제와 언론의 신뢰 상실의 원인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1. 언론의 공론장

하버마스에게 공론장은 민주주의 원리로 규정된다. 개인의 자연권은 물론, 보통선거권이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모두 공론장을

7) 오동석, “공공부문과 민주법학: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접근,” 『민주법학』, 23호, 2003, 38쪽.

바탕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장은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원칙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각자의 개인적 성향, 희망, 신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리인 것이다.⁸⁾ 당연히 공론장 개념은 언론의 민주적 역할에서도 논의된다. 그의 『공론장의 구조적 변동』은 시민적 공론장(bürgerliche Öffentlichkeit)⁹⁾의 형성과 쇠퇴를 역사적으로 서술하면서, 후기자본주의하에서 공론적 의사소통의 몰락을 극복하려고 한다. 여기서 그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공적 토론의 장을 제공하며, 사적 시민들을 여론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적인 집합체로 재구성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버마스는 공론장 이론을 통해 언론을 위한 규범적 틀을 제시한다. 언론은 자본주의 내에서의 상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과는 달리 사회내의 문화적 정치적 삶에서의 사사로운 이익을 넘어서는 보다 공적 이익을 위한 일을 수행하는 기구로 인식하는 데서 언론의 민주적 역할을 위한 규범성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통해 하버마스는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목표로 삼는다.¹⁰⁾ 현대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주체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억압된 사회다. 권력에 의해

8)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341쪽.

9) 하버마스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공론장은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분리되기 시작한 국가와 부르주아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회영역으로 등장했다.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 단계에 중상주의적 국가 정책에 의해 규제와 보호를 받던 시민계급은 오히려 국가의 개입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과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시민계급은 처음에는 단지 국가 공권력 행사의 대상에 불과했지만 점차로 국가 공권력 행사를 비판하는 공중으로 결집되었는데, 이렇게 시민계급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여 의사결정을 해나가던 영역이 바로 시민적 공론장이다.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79-93쪽.

10)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I, II (Frankfurt: Suhrkamp, 1981).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의 형태는 한편 지배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다른 한편 조직화된 강제구조를 정당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의사소통 그 물망이 체계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생활세계가 왜곡된 의사소통의 그물망 가운데 놓여있기에 이를 극복하는 하버마스의 전략은 의사소통이론을 통해 왜곡되고 병든 의사소통의 사회적 조건을 비판하기 위한 합리적 규범적 기준을 내보이는 것이다.

언론의 민주적 역할은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론장의 재봉건화’(Refeudalisierung der Öffentlichkeit)라는 테제로부터 시작된다.¹¹⁾ 자본주의사회가 심화되면서 시민적 공론장이 축소되고, 오히려 언론에 의해 공론장이 재봉건화 된다. 사실 봉건사회의 특징이던 전시적 공론장(repräsentative Öffentlichkeit)¹²⁾이 시민적 공론장으로 변천하는 과정이 상호이해 지향적이며, 이성적 언어행위가 시민들의 자아에 투영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시민적 공론장이 축소되고, 시민적 공론장에서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던 언론매체는 시민들을 정치참여의 중심에서 밀어내게 한다. 공론장의 재봉건화는 환언하면, 전시적 공론장이 시민적 공론장을 다시 잠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오늘날의 언론이나 방송은 시민의 참여보다는 흥밋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적인 것을 전시적인 것으로 전락시킨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들은 그 어느 것도 대표하지 못하는 문화소비대중으로 전락하고 만다. 결국 소수의 부와 권력을 지닌 엘리트만이 사회를 대표할 뿐이다.¹³⁾ 기껏해야 언론매체는 대중에게 전시적으로 개방되고 대중의

11) Jürgen Habermas, *Theorie und Praxis* (Frankfurt: Suhrkamp, 1971), 45쪽.

12) ‘전시적 공론장’은 각성된 시민의 이성이 아니라 전제군주의 자의적인 의지에 따른 공론장이다. 전시적 공론장은 봉건제의 지배계급인 귀족, 교회 성직자, 왕 등이 자신의 신분을 내보이는 무대가 형성된다. 여기서 백성은 전시적 지배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전시적 공론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이다.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17쪽.

의지를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주주의의 이념이 훼손된다. 어떻게 보면 언론매체의 팽창에 따른 공중의 소멸과 체계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공론장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 할 수 있다. 결국 공론장의 재봉건화는 상호이해적 의사소통 행위를 목적으로 삼는 의사소통 환경에 대한 위협이다.

그렇다면 공론장의 재봉건화라는 병리현상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는 체계의 명령이 생활세계의 영역으로 식민화하려는 공격적 시도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하버마스에게 민주적 방식이란, 상호이해 지향적 언어행위를 통해 담론을 형성하는, 즉 규범형성과정이 실현되는 방식과 같다. 하버마스는 외부적 지배를 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의사소통적으로 무장한 대항권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¹⁴⁾ 즉, 경제적·행정적 권력은 의사소통적으로 산출된 힘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소통적으로 산출된 힘은 수많은 공론장들(Öffentlichkeiten)¹⁵⁾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 공론장들은 의견형성이라는 경쟁 속에서 이러한 힘을 생산해낸다. 이 부분 공론장들이 자율적 의사소통 공동체를 낳는다는 것이다.¹⁶⁾ 자율적이라 함은 정치체계에 의해 정당성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즉 도구화되지 않은 공론장을 뜻한다. 규범적이고 의사소통적으로 산출된 권력에 의해 힘입은 자율적 공동체는 체계의 어떠한 강제에도 결코 소멸할 수 없으며, 생활세계 환경을 보존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정적·제

13) John Durham Peters, "Distrust of Representation: Habermas on the Public Sphere," *Media, Culture and Society*, Vol. 15(1993), 547쪽.

14) "Vorwort zur Neuauflage,"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1990년판, 32쪽.

15) 하버마스는 처음에는 '공론장'을 단수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공론장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거시적인 사회구성 주체로서 정해져버린 공론장보다는 경험적 일상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분적 단위들로 드러나는 상대적이고 역동적인 공론장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Ibid., 33쪽.

16) Ibid., 44쪽.

도적 차원에 대해 규범적 개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버마스는 대중매체가 한편으로는 새로운 학습 가능성을 열어 주는 계기로 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내부구조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대중매체는 계도와 통제, 정보와 광고, 교육과 조작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하버마스는 언론과 방송이 대중을 마취시키고, 정치적 충성심을 조작적으로 형성하며, 정보 확산 전략을 통해 국민의 탈정치화를 조장하는 것을 위기로 파악하면서도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힘이 결코 제거되지 않음을 확신한다. “그 이유는 의사소통 구조 자체에 해방적 잠재력이라는 균형추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¹⁷⁾이라는 것이다. 즉 하버마스는 비판을 위한 규범적 잠재력을 언어와 의사소통의 보편성에서 발견한다. 의사소통의 내부구조에 자리 잡고 있는 해방적 잠재력에서 비롯되는 언론매체에 대한 낙관적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언론매체들은 서로 경쟁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에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전문직업적, 그리고 매체미학의 관점들을 결코 완벽하게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이며, 대중매체는 언론인의 사명에서 비롯된 의무로부터 비롯된 갈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며, 매체의 내용이 아무리 대중의 기호에 부응하는 통속적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판적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데올로기적인 메시지는 그것이 의도하는 의미가 특정 하위문화적 배경이라는 수용조건 아래서 전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의사소통의 일상실천의 고유의미는 대중매체의 조작적 시도에 저항한다는 것이고, 끝으로 전자매체의 기술적 발전이 필연적으로 네트워크의 중앙집중화를 조장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¹⁸⁾

결국, 하버마스에 따르면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란 한편으로

17)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II, 573.

18) *Ibid.*, 574-575쪽 참고.

다수의 공론장들을 통한 의사소통 공동체의 활성화와, 다른 한편으로 매체에 대한 규범적 개입이라는 두 가지 전략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셈이다. 과거 시민적 공론장이 봉건적 전제군주와 투쟁했다면, 오늘날 의사소통적 공론장의 싸움 상대는 후기자본주의의 침범인 시장, 그리고 고도로 복잡한 행정력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업적 이해관계로 변하면서, 정치적 소신에 기반 한 언론 보다는 상업적 이익에 혈안이 된 언론으로 변질된 현실에서, 의사소통적 이성을 잠식하는 자본적·행정적 공격에 대한 민주적 역제력이 의사소통적 이성 그 자체에 내장되어 있다는 주장이다.¹⁹⁾

2. 한국 언론의 신뢰 상실과 공론장의 붕괴

일제 강점기의 친일매국언론은 처벌은커녕 지금까지 한 마디의 반성 없이 한국의 주류언론으로서 그 명맥을 굳건하게 이어오고 있다. 그들은 친일매국언론에서 친독재언론, 친시장언론을 거쳐 이제는 언론권력으로 자리하며 민주 언론의 탈을 쓰고 변신을 거듭하며 왜곡된 여론 형성의 주도권을 행사해왔다.²⁰⁾ 주류 언론은 독재권력의 도구가 된 대가로 재벌 언론, 언론권력이란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이다.²¹⁾ 언론권력은 쿠데타와

19) "Vorwort zur Neuauflage,"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1990년판, 36쪽.

20) 마땅히 심판받고 사라졌어야 할 대표적 친일매국언론 <조선일보>는 한국전쟁 때는 침략 인민군을 환대하고, 서울 수복 이후에는 이승만의 무능과 독재에 대해서 외면하는 식으로 동조하고, 박정희·전두환 등 내란범 들을 우상화하는데 앞장섰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한국전쟁 중 고급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착복함으로써 수많은 국군을 동사·아사케 한 '국민방위군사건'을 보도하지 않았고, 이승만의 악랄한 선거부정 등에는 침묵함으로 동조했다. 그리고 이승만이 하야하자 "만세! 민권은 이겼다!"며 표변했다가 5.16쿠데타 이후 군부세력에 적극 밀착했다. 이후 광주시민 학살로 서울의 봄을 깬 전두환을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이라 찬양했다. 이것이 소위 대한민국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보수 언론 <조선일보>의 민낯이다. 민동기·김용민,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서울: 휴먼큐브, 2015), 318-319쪽.

21)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언론과 사회』, 6호, 1994, 42-43쪽.

학살의 주역을 ‘민족의 태양이라 찬미하고, 그 태양이 지시하는 ‘보도지침’을 충실히 따름과 동시에 이에 저항하는 자사 소속의 언론인들에 대한 숙청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권력에 진입한 것이다. 물론 자유언론을 수호하려던 언론인들의 저항이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독재의 횡포와 억압에 저항해 자유와 민주 그리고 민중 언론으로 맞선 역사도 있었다. 허위와 왜곡의 강요에는 진실과 공정의 언론으로 맞서려는 몸부림도 있었다. 예컨대 기독교방송 CBS는 3·15 부정선거부터 4·19혁명까지 생중계를 했었고, 박정희 독재정권에 날선 비판을 가했으며, 전두환 정권에 의해 보도와 광고 기능을 박탈당하면서도 고문, 언론장악, 민생파탄을 고발한 자랑스런 역사를 간직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6월항쟁을 통해 언론의 공론장에 국민주신문 〈한겨레신문〉 창간과 언론노동조합 결성이라는 열매를 맺기도 했었다. 그러나 언론 권력으로 자리매김 되는 주류 언론의 역사는 그러하지 못했다. 통사적으로 친일언론에서 친독재언론을 거쳐 친자본언론으로 변신해 온 주류 언론이 언제나 승자로 군림해온 것이 한국 언론의 현주소다.

87년 6월 항쟁공간에서 힘들게 확보한 편집권 독립은 3당 합당과 함께 바로 의미를 잃었다. 말하자면, 언론 공론장의 재봉건화가 즉시 이루어진 것이다. 1991년 동아 사태²²⁾는 신문 편집권이 철저히 언론자본에 의해 유린당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결국 동아일보를 떠나게 된 김중배의 말은 당시의 언론 상황을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다. “과거 언론 자유를 위협한 세력은 정치권력이었지만 90년대 들면서 자본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최대 세력으로 등장했다.”²³⁾ 92년 대선에 즈음하여 재벌언론은 노골적으

22) 〈동아일보〉의 김병관 사장이 김중배 편집국장을 돌연 경질한 사건이다. 윤정모의 소설 서평 글, 역사학자 안병욱 교수의 글, 빈민운동가 제정구의 글이 실린 것을 문제 삼아 체제 부정이나 국민의 위화감 조성에 동아의 지면을 할애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3) 송건호 외, 『한국언론 바로보기 100년』 (서울: 다섯수레, 2012), 527쪽.

로 선거에서 집권세력을 도와주면서 그 자신을 ‘언론권력’으로 자리매김 시킨다.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고 그의 재임 기간에 언론권력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힌 신문들은 1997년 대선에서도 ‘킹 메이커’를 자임하며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언론권력이 민주주의의 기본제도인 투표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그것이 경제 발전이나 노사 관계 보도와 논평에서도 기득권 세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 공론장에서는 수구적 이념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이념도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에서든 남북관계에서든 진보·개혁을 지향하는 집단을 억압하는 편파성을 띠므로써 언론권력은 스스로 시민적·의사소통적 공론장을 파괴시켰다.

김대중 정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언론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언론자본의 불법적 행태와 부도덕한 황제식 경영을 드러내는 데 그쳤을 뿐 언론 운동 단체들이 요구해 온 소유 구조 개혁 입법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구속되었던 언론사 사주들은 곧바로 사면·복권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언론 운동 단체들은 줄곧 언론 개혁 입법을 요구하여 신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언론연대가 강조했던 언론 개혁 입법의 핵심인 ‘편집의 자율성’이 실종되고 말았다. 결국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시민사회의 언론개혁 운동으로 정치권을 자극해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법 제정에 이르렀지만 그 결과는 한 정적인 것이었고, 그 성과조차 언론권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후퇴하고 말았다. 이명박은 집권하자마자 조중동에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해줄 수 있는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하고 그로써 언론권력이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국면을 열었다.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관련해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큰 사건에서 언론권력이 보여준 모습은 정권의 경호견(guard dog)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업적이고 저열한 모습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물론, 특히 작년 ‘세월호 대참사’에서 언론의 오보사태²⁴⁾는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언론은 세월호 침몰 이후에도 반성보다는 편향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시 오보를 낸 언론들이 이명박 정권 내내 즐기차고 교묘하게 이어진 방송 장악 과정의 결과²⁵⁾ 언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권과 기득권 집단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보도 행태를 보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4)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세월호 참사 한 달여 지난 다음 “거짓 방송이 아이들을 죽였다”는 특별보고서에서 세월호 관련 방송 보도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전원 구조’ 오보였다. 최초 오보를 낸 MBC는 물론 타방송사 기자들도 현장에서 전원구조가 아니라는 감을 충분히 잡았고 정보 보고를 했을 터인데도 오보는 쉽게 수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일 오후 해경과 해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입으로 구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허위보도까지 내놓았다. 심지어 구조 승객 인터뷰 내용 중 해경 구조대원들이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발언도 삭제해서 보도했다. 추측성 기사로 속보 경쟁을 한 셈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거짓방송이 아이들을 죽였다”, 『시민과 언론』 17호, 세월호 특별판, 2014. 5. 28.

25)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은 김서중의 “세월호 참사 보도의 참혹함은 예정된 것”, 『황해문화』, 2014년 가을호, 280-297쪽을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① 이명박 대통령인수위의 2008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고 졸속 통과 ②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 출신 최시중이 방통위원장이 되고 곧 바로 KBS 정연주 사장 해임 ③ YTN에 이명박 후보 방송담당 상임특보 구분홍을 사장으로 앉혔고, 이에 저항하는 노조원 33명을 인사발령 거부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 ④ 2010년 2월 MBC 엄기영 사장을 사퇴시키고, <PD수첩>에 대한 기소,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압박 등을 통해 MBC 압박, MBC의 방송문화진흥회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김재철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임사장 사퇴문제 압박과 신임 사장의 경영진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하였다고 파업·항의한 노조위원장을 해임시키고, 방송민주화의 산물인 국장책임제를 일방적으로 해지. ⑤ 미디어 관련 악법 날치기 통과: 미디어 관련법 즉 방송법, 신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방송영역에서 금지되었던 대기업, 신문의 진출을 허용. 즉 미디어 관련법 개악으로 이미 신문업계의 강자인 조·중·동·매를 종합편성채널의 대주주로 만들어줌. ⑥ 이후 중편에 대한 특혜

특히 'TV조선'과 '채널A'같은 종편방송은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을 묻거나 그에 반하는 행태에 대해서 '헌정질서 부정' 나아가 '중복'이라는 판에 박힌 이념적 공격으로 현 정권을 보호했다. 대통령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농성은 외면하고 특별법 내용 중 유가족이 주장한 바 없는 의사자 선정 등 보상·배상에 관한 부분을 부각시킨 MBC의 왜곡보도, 사고 이후 시종일관 유병언 관련 보도를 선택·집중시켜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을 유병언만 체포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호도한 것, 또한 본질 왜곡의 사태 속에서 언론이 유씨의 아들과 여성 경호원을 둘러싼 선정주의적 속보 경쟁 행태를 보인 것 등 이러한 예들은 황색저널리즘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다. 이런 사태에서 수용자들이 접하게 된 것은 상업적인 언론 못지않게 지배 권력을 지키는 경호견의 모습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언론의 경호견화는 이명박 정권 내내 이어진 문제였지만, 300명이 넘는 어린 생명을 잃은 상황에서조차 권력을 옹호하는 언론을 보며 분노한 수용자들은 기꺼이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언론에 대한 불신은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언론정책의 산물이며, 따라서 수년에 걸친 방송의 재편 과정을 역으로 해체하기 전까진 언론의 신뢰성 회복이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과 종편방송의 관계를 보면 현 한국 언론 신뢰 상실의 구조적인 측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권의 엄청난 특혜²⁶⁾ 속에 주류언론 조·중·동·매가 주도한 컨소시엄들의 종편 사업이 승인되었다. 종편은 산업성장이라는 미명²⁷⁾ 아래 추진되었지만, 실상은 이명박 정권이 의도했던 이

26) 김서중, "종편-특혜, 특혜, 특혜," 『황해문화』, 2011년 봄호, 495-501쪽 참고.

27) 미디어 관련법 개정 당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학자들까지 가세해서 종편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대략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시차 진입에

넘 편향적 방송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자칭 보수라 주장하는 메이저 신문들이 방송 보도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편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고, 편파적인 선정 이후에도 종편에 대한 특혜는 중단 없이 이어졌다. 종편방송을 무리하게 승인하고 그들을 위해 비대칭 규제를 유지하고 특혜를 부여한 이명박 정권이나 2012년 대선 기간의 저질스런 막말, 편파 방송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종편들²⁸⁾은 재 승인해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철저한 정권유지의 경호군 역할을 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과도한 보도와 시사토론 관련 콘텐츠로 집합적인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는 종편(사실상 한국의 종편은 종편이라기보다 보도채널이라 해야 한다)의 부상은 극단적으로 정파적이고, 집권 권력 편향적이며, 거친 저널리즘의 출현을 가져왔다.²⁹⁾ 이러한 종편의 매우 정파적인 그리고 다분히 공격적인 황색

따른 투자로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그 결과 대규모 생산유발과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출현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고, 신규 채널의 진입으로 지상파의 독과점 현상을 완화고,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폐해였던 방송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극복한다는 것이었다. 윤석민, “21세기초 우리나라의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 『매일경제 주최 디지털컨버전스포럼: 한국방송산업 발전전략 토론회 자료집』, 2009. 8. 17; 하주용, “종합편성채널도입-사업선정지원방안,” 『한국방송학회자료집』, 2010. 7. 23 참고.

28) 원희영과 윤석민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종편 4개사의 보도 공정성을 측정하는 연구를 통해 대선기간 총 열흘 치 저녁 메인 종합 뉴스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한 결과, TV조선과 채널A의 박근혜 후보 편향성을 드러내었고 이러한 편향성을 박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을 때 심화되었음을 확인했다. 원희영·윤석민,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제18대 대통령 선거보도 프로그램의 정량적 및 정성적 편향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29-1, 2015, 117-148 쪽.

29) 종편이 세상에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유영주는 종편에 대해 그것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정책에 대해 2공영 1민영 방송체제를 1관제 다민영 체제로 전환하고, 종편채널의 도입으로 조중동식 저널리즘(정권의 선전 기능과 정권의 정치기획의 폭력성과 배타성을 바탕으로 한)을 방송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진단했다(유영주, “종편 도입과 특혜,” 『진보평론』 제49호, 2011년 가을, 236-237쪽). 그리고 종편 탄생 후 그것의 역할에 대해 언론학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2013년 11월 『경향신문』이

저널리즘은 언론이 규범적으로 준수하고 성찰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공정성과 공공성의 발현과는 거리가 멀며, 여권 편향과 수구적인 의제의 집중적인 담론화를 통해 노골적인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오늘날 한국의 주류언론은 독재권력의 ‘보도지침’을 충실하게 따른 철면피의 대가로 권력의 확대와 자본의 축적을 이루었다. 언론권력으로 굳어진 이래 이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치권력의 경호군 역할을 통해 자본의 시공창으로 전락한 행태를 보여준다. 이 와중에 반민족·반민주·반민중적 여론 조작으로 말미암아 희생되고 상처받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현실에서 언론의 신뢰 상실은 지극히 당연하다.

III. 제도언론과 공론장 회복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공중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둘러싼 경쟁에서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다원주의를 신장하려면 언론의 정치적·사회적 권력을 규제하는 적절한 법이 요청된다. 이런 맥락에 대한 규범적 반응으로서 하버마스는 언론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언론매체는 자신을 계몽된 공중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 이해해야한다. 언론매체는 사법부와 유사하게 정치적 행위자와 사회적 행위자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언론매체는 공중의 관심사의 제안을 공평무사하게 수용해야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방송학회 소속 학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이메일로 조사한 결과, 종편의 역할과 성과를 문의하는 질문에 48명의 연구자들이 100점 만점에 평균 45.23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준 바 있다. 학자들은 종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념·정치적 편향성’(50%), 보도 채널화(22.9%), 정치 프로그램의 과잉(8.3%), 선정·자극성(8.3%)을 순으로 답변을 제시했다(『경향신문』, 2013. 11. 20. 기사 참고).

하며, 이 주제와 의견들에 비추어 정치과정을 비판하고 정당화를 요구해야 한다. 언론매체는 미디어의 권력을 중립화해야 하며, 행정 권력이나 사회적 권력이 공중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³⁰⁾

언론은 다원주의적 의사수렴과 의사개진에 충실해야 하고, 상호보완적 관점 또는 대안적인 관점을 경쟁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공론장은 적합한 쟁점을 여과시켜 사회에 확산함으로써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자유롭게 개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하버마스는 공론장이 어떤 내용을 담지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실천의 규칙이요 공적 의견을 공론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형식적 기준이다.³¹⁾

절차와 형식을 강조하는 하버마스의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절차적 공정성 즉 ‘옴’의 윤리에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그 자체가 권력이 되고 있기에, 하버마스는 언론권력을 적법한 틀과 수단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언론이 권력화 된 상황에서 사회의 다원성을 보장하려면 언론에 대해 반독점법과 같은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신문과 방송의 보도에 관련해 편집진과 경영 및 재정을 담당하는 부분 사이의 기능적 분화와 독립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³²⁾ 이는 곧 미디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한 쪽의 힘을 다른

30) Jürgen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1992), 한상진·박영도 공역,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서울: 나남, 2002), 454쪽.

31) Ibid., 435-436쪽 참고.

32) 하버마스는 구체적으로 독일 사회처럼 대기업이 언론에 손대지 못하도록 할 것, 미디어의 내부구조를 조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편집진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것, 고위편집진의 선임에 광범위한 청문회 등을 도입해서 사주의 결정을 신중하게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Jürgen Habermas, “인터뷰3: 공론장과 한국사회,”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656-657쪽.

한 쪽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장치가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언론은 다원주의적 의사수렴과 의사개진에 충실해야 하며, 상호 보완적 관점 또는 대안적 관점을 경쟁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장이란 바로 “적합한 쟁점을 여과시켜 사회에 확산함으로써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자유롭게 개진되는 곳이기”에, 공론장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능한 한 선명하게, 거의 합의점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수준까지 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³³⁾ 한국의 언론이 옳음의 윤리가 작동되는 공론장으로서의 제도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① 방송언론의 구조 개혁: 한국의 언론의 경우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송언론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³⁴⁾

33) Ibid., 657-658쪽.

34) KBS 1TV는 국가 기간방송이자 국가 재난주관방송기기에 KBS 1TV만큼은 고도의 중립성과 품격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곳은 KBS이사회다. KBS이사가 11명인데 여권 추천 이사가 7명, 야권 추천 이사가 4명이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권일수록 공영방송은 정권의 전리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권은 임명권(임명권과 임면권이 다르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을 임면권으로 해석하여 KBS사장을 면직을 시켰다. 권력이 이런 불법을 저질러도 묵인되는 비 신뢰사회가 한국 사회라 할 수 있다. MBC는 주식회사 구조다. 그런데 주식의 70%를 방송문화진흥회가 소유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공기관이다. 그래서 MBC를 우리는 공영방송이라 부른다. 그런데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나머지 지분 30%를 정수장 학회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GH정권에서는 방송의 소유주가 박근혜인 셈이다. 그런데 대주주 방문진은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 방문진의 분포는 여당추천 6명 야당추천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히 MBC 사장도 여당이 결정하는 구조이다. 뉴스 방송 YTN은 한전 등 공기업 지분이 58%이다. 그런데 공기업 사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따라 뉴스 논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가 운영하는 뉴스Y 역시 마찬가지다.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 지분의 30.77%, KBS가 27.77%, MBC가 23.73%, 중앙일간지 9개사가 7.82% 지방일간지 9개사가 4.91%를 차지한다. 그런데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은 대통령이 2명 추천하고 여당이 2명 추천하게 되어 있고, 한국신문협회가 1명 추천, 한국방송협회가 1명 추천, 그리고 나머지 1 명이 야당 추천이다. 연합뉴스 역시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가 언론의 공정성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인물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사장은 하부 보도 편성 제작 책임자를 자신과 뜻이 맞는 인물로 배치하는 상황에서 뉴스의 내용이 공정성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 방송언론 개혁의 첫걸음은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공정 보도 기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변모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송언론의 지배구조 개혁은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연성을 갖는다. 국회 등의 견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전제로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도 모색해 볼직하다.

② 언론사 소유구조 개혁: 언론사의 경우는 가장 심각한 것이 소유구조에 있다 할 것이다. 중앙의 4대 일간지가 전국지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신문사가 1인 지배체제에 놓이게 된다면 결국 전국의 여론이 소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론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론몰이를 통해서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언론권력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권언유착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수용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이다. 소유구조의 개혁은 신문개혁의 출발점이다. 소유구조의 개혁은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공적 성격의 회복이라는 논리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의 소유집중에 의한 여론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벌의 신문사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신문의 1인 족벌 지배체제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언론사 편집(성)권 독립: 언론사의 내적 자유 즉 편집권의 독립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에 의한 언론의 통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언론종사자들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민동기·김용민,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84-100쪽 참고.

다. 현행 정간법은 제6조에서 “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³⁵⁾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후속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특히 소유주, 경영진의 편집에 대한 개입, 취재 사실을 무시한 편집 간부의 일방적인 기사 왜곡 등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언론자유’ 원칙의 핵심을 이루는 편집권의 독립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 1월 12일부터 발효된 방송법에 편성규약(editorship statute) 체결을 명문화시켰다. 현장에서 편성과 제작실무자들이 겪는 독립성과 자율권 침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방송사업자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유럽의 법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편성규약의 의미와 목적, 실천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선언적 조항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편성규약은 언론의 편성권에 대하여 소유주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편집진의 집단적 권리로 못 박고 있다.³⁶⁾

3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9731#0000>.

36) 편성규약을 일찍이 체결하고 선도해 나간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이다. 독일은 NDR 등 11개 공영방송과 37개 지역 민간라디오방송, 민영TV방송 가운데 보도 채널인 n-tv와 N24, 종합채널 RTL과 Sat1 등 약 55개의 방송사가 있고,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공영 ORF와 민영라디오방송 등에서 체결하고 있다. 이들 방송에서는 편성·제작실무자들이 자율적으로 편성과 제작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며, 특히 이들이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견해를 대변하거나, 정황과 다른 정보를 옳다고 주장하도록 강요받거나, 이미 진실에 입각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의 의견과 사실 기술에 반하는 다른 정황을 옳다고 주장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들 국가에서의 편성규약은 편성·제작자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제작을 위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2001년 방송법 개정부터 편성규약을 의무화했으나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심영섭, “방송법 제4조 제4항의 편성규약 제정의무의 실효성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8권 3호, 2010, 204-231

언론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발언권을 행사한다는 암묵적인 전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에 언론은 민주사회에서 편집권 독립과 관행의 윤리성에 대한 성찰과 언론활동에 대한 고지의 의무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책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제도들 중에 옴부즈맨(ombusmen)³⁷⁾ 제도의 활용은 매우 유익하다. 사익과 권력만을 추구하고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제도 언론이 시민의 대리인적 소임을 성찰하거나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공론장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사실상 한국의 주류언론은 정치·경제 권력과 밀착되어 있기에 그 틀을 깨기 위해선 민주적인 정권이 창출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IV. 대안언론과 공론장 회복

인간의 기본권 및 사회적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해야 할 언론이 사실상 언론권력으로 군림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진보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언론에서 탈피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언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언론이 지나치게 공정성이나 형식주의, 객관주의에 사로잡히게 됨으로써 오히려 참다운 저널리즘의 구현이 어렵게 되었다는 비판과 더불어 ‘좋은’의 규범성이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좋은’의 윤리가 작동하는 언론이란 언론의 수행가치에 중점을 둔다. 말하자면

쪽 참고.

37) 우리나라 언론도 미디어 책무라는 차원에서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나름 민주주의 사회에서 편집권 독립과 관행의 윤리성에 대한 성찰을 하고는 있으나,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언론사 자사 이익과 이념적 정파성에 의한 악용, 왜곡된 동업자 정신, 침묵의 카르텔 등 언론 종사자 자체의 인식 부족, 권력의 낙하산으로 방송사를 경영하는 최고경영자들의 무사안일주의 등으로 인해 미디어 비평이나 옴부즈맨 활동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홍원식·김은정, “TV미디어 비평의 어제와 오늘: ‘미디어비평(KBS) 10년, 내용분석,’” 『한국언론학정보』, 64호, 2013, 59-84쪽 참고.

공동체의 목표를 잘 수행하고 가치를 고양하며 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언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안언론”(alternative journalism)의 운용에 대한 모색이 이미 1970년대 서구 시민사회에서 모색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는 제도언론의 공론장 회복의 한계를 보완하는 맥락에서 대안언론의 공론장 논의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의 공론장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앞 장에서 본 대로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붕괴에 대응해 해방적 공론장을 제의한 것이 사실이다. 그가 설정하는 공론장은 비판적·규범적 가치들로서, 이성에 의해 이끌어지는 것이다. 거기서는 제약 없는 토론의 원칙과 정치적 의견형성 과정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을 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그는 비판적 공지(kritische Publizität)를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함께 공론장의 붕괴 내지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복원시키는 주요 요소로 본다. 비판적 공지가 국가제도나 정당 기타의 조직들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통제하고 또한 대의적 지배체제도 조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³⁸⁾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해방적 공론장 혹은 규범가치와 이성 에 의해 이끌어지는 공론장의 구축은 시민적 공론장 개념을 너무 이상화시키는 바람에 역사적으로 시민적 공론장과 나란히 발전된 평민적 공론장이나 프롤레타리아 공론장을 논의에서 배제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³⁹⁾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공론장 모델은 계급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보편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으로서 체계 자체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체

38)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228.

39) Oskar Reinhard Negt & Alexander Kluge, *Öffentlichkeit und Erfahrung: Zur Organisationsanalyse von bürgerlicher und proletarischer Öffentlichkeit* (Frankfurt: Suhrkamp, 1972), 41쪽.

계의 식민지화에 따른 병리적 현상을 포착해 공론장에서 이를 치유할 수 있을 뿐, 체계 자체가 지닌 구조적 문제까지 공론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⁰⁾ 사실 하버마스는 체계 자체의 문제를 파고들지 않으므로써 ‘이상적 대화 상황’의 경우도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상호비판과 합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만을 제시할 따름이지 이상적 대화 상황이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⁴¹⁾ 하버마스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마당으로서의 공론장 복구 실천을 대안언론에서 찾고자 한다.

바이흘러(K. Weichler)는 대안언론에 대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광고를 신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민주적으로 구성된 집합적 편집에 의해 만들어지는 언론매체로서 전통적 매체에 대응하여 대안 공론장을 생산한다는 의도를 갖는다”⁴²⁾라고 규정한다. 제도 언론의 공론장 확보의 한계를 직시한 오이리히(C. Eurich) 역시 언론의 구조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대안적 언론형태를 모색한다. 그가 말하는 대안언론의 특징은 자율적 조직과 고유의 발의를 통하여 의사소통적 참여와 공론장에서의 참여를 확립하는 것이다.⁴³⁾ 제도 언론들은 경직화되어 있어 민주적 공론장의 생산에 한계를 갖는다. 이미 상업화된

40) 선우현, 『사회비판과 정치적 실천: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서울: 백의, 1999), 190-193쪽 참고.

41) Ibid., 211-214쪽 참고.

42) Kurt Weichler, *Die anderen Medien: Theorie und Praxis alternativer Kommunikation* (Berlin: Vistas, 1987), 151쪽.

43) Claus Eurich, *Kommunikative Partizipation und partizipatorische Kommunikationsforschung* (Frankfurt: R. G. Fischer, 1980), 260쪽.

대중매체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과 욕구를 담아내기보다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매체 내에서의 관료주의적 고자세는 매체의 경직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그리고 내용상 단절적이고 파편화된 기사나 프로그램들은 수용자 공중에게 사실 그대로의 상황 전달이 불가능하여 사실을 옳게 파악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응하여 오이리히가 제시하는 대안언론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⁴⁴⁾

① 기존의 주류언론들이 중심부 인물들 중심으로 기사화 하는 데 반하여 대안언론은 주변부의, 기존언론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기 때문에 소재 또한 주변부적 소재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매체들이 다루지 않거나 또는 기피하는 소재들이다. 그러나 이 소재들은 생활과 동떨어진 그리고 파편화된 내용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들로서 단편적이 아니다. 즉, 사안의 배경, 과정, 결과 나아가 해답까지도 제시하려는 인과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내용구성을 추구한다.

② 대안언론은 피해 당사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넘어 변호인 역할까지 담당하려는 자세이다. 적극적 관여의 태도로 인해 언론의 내용적 성격도 객관성과 불편부당성이 중시되기보다는 편파성을 갖는 의견기사적 성격을 갖는다.

③ 신뢰성을 중시하는 대안언론은 수용자 공중의 생생한 경험을 거르지 않는다. 가급적 많은 수용자들의 참여를 꾀하는 대안언론은 사안의 당사자들이 직접 글을 쓰고 나아가 편집에 참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즉 송신자와 수용자의 구분을 지양하는데 이것은 편집에서 고정 편집진에 의해서가 아닌 다수가 제한 없이 참여하는 편집공동체의 원칙으로까지도 발전한다. 기존 주류언론이 전문성에 의거하여 작업 분담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대안언론에서는 비전문성의 필진과 참여자로 작업도 고정적이지 않고 순환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한 분야에 고정 배치되어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44) C. Eurich, "Gegen - oder Komplementär? Zu Gegenstand, Funktion und Ursache 'Alternativer' Kommunikation," in Otfried Jarren(Hrsg.), *Stadtteilzeitung und lokale Kommunikation* (München: Saur, 1983), 18-19쪽 참조.

업무를 바꾸면서 작업한다. 이러한 순환적 작업은 참여자로 하여금 참여의 의미를 실감하게 하여 만족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⁴⁵⁾

④ 기존의 언론이 매매, 광고, 시장성과 이윤·정향적이라면, 대안언론은 매매나 기부금, 모금, 사재부담 등으로 운영한다. 그렇기에 대안언론은 광고로부터의 독립이 필수다. 이것은 언론에 대한 광고주로부터의 간섭 문제뿐만 아니라, 광고 자체가 갖는 조작적 성격에 대응하는 내적 고려이다. 대안언론은 언론의 자유와 수익성과의 충돌에 대처하기위해 대표적으로 취해지는 전술은 광고에 대한 제한이다. 이것은 양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제한도 강구된다. 광고의 게재를 부정하는 대안언론의 재정해결 방안은 일반적으로 기부금, 모금 그리고 독지가의 도움에 의존하게 된다. 더 나아가 공적 지원에서도 조심스런 태도를 취할 것을 강조한다. 공적 지원 역시 언론에 간섭의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⑤ 대안언론은 또한 수용자 공중의 행동화를 추구한다. 대안언론의 최종적 목적은 문제시 된 사안의 해결 내지는 개혁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최종적 수단으로 행동화를 선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안언론의 수용자 역시 이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공론장 회복을 위한 서구의 대안언론을 우리 상황에서 검토할 때 긍정적인 부분과 그대로 답습하기엔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언론권력에 대응하여 중심부의 엘리트들이 아니라 주변부 시민을 주 대상으로 소외된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언론권력이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왜곡했던 주제를 파헤치고 발굴하고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편들어 주는 공론장의 마련은 그 자체로 윤리적 당위성을 갖는

45) 그래서 대안언론은 특정한 혹은 전문직에 의한 생산을 제한한다. 구성된 모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무보수 작업과 집합적 작업을 선호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제한이나 전제조건을 두지 않는다. 모두 같은 수준이란 전제하에 순환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 할 것이다. 개인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것은 개별적 이익의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으로서의 덕을 가꾸는 일이다. 공동체주의에서 좋음, 즉 선은 목적이자 의무가 되기 때문에 언론 역시 그 사회에 대해 ‘좋은’ 언론이 되어야 할 목적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대안언론은 좋은 언론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며, 언론의 수행가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언론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넘어서 시민들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 언론권력이 시민적 공론장의 형성은 고사하고 그런 공론장마저도 붕괴시키는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대안언론이야말로 공론장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바람직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언론’으로서의 대안언론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다. 첫째, 서구의 경우 생산에 참여하는 이른바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대학생과 교사들인데, 한국의 경우 과연 그럴 수 있는가하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편집공동체 편집은 특정 전문인들에 의한 편집이 아닌 다수의 성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틀을 정하게 되는 바, 이를 자연스럽게 전개시킬 역량과 기제가 우리에게 있을지 의문이 든다. 둘째, 대안언론의 재정적인 문제다. 서구의 대안언론은 광고로부터의 해방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다. 서구에서는 광고수입 대신 기부금이나 모금 그리고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대체하여 재정적 독립을 이룩하지만, 한국의 사회문화적 풍토에서 전적인 모금이나 기부 중심으로 장기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도 든다. 대안언론의 존립 여부도 역시 관건은 경제적인 것으로 보인다. 광고수입과 판매에 의한 재정확보가 마련되지 않으면 대안언론은 성공가능성이 희박하

다.

대안언론의 장점을 되새기면서 그것의 약점을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한국의 독립언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매체를 수단으로 하는 〈오마이뉴스〉, 〈국민TV〉나 〈고발뉴스〉, 〈뉴스타파〉 같은 독립언론이 그들이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은 매체 특성상 민주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이미 〈오마이뉴스〉의 성공은 세계 언론사에 남을만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모든 시민은 기자'라는 신념의 대안정신은 기존의 언론 권력에 상당한 도전을 준 것이 사실이다. 오연호는 〈오마이뉴스〉 창간의 언론운동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⁴⁶⁾

① 뉴스의 공급·수요 문화의 민주주의를 이룩한다. 〈오마이뉴스〉는 출발부터 대한민국의 봉건적인 뉴스 공급과 수요의 문화를 실천적으로 혁파해나갈 것이다.

② 뉴스 연대를 만든다. 참여연대가 시민운동가들의 연대라면 뉴스 연대는 언론운동가들의 연대다.

③ 언론 권력을 교체한다. 뉴스 연대 등을 통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보수연합을 능가하는 언론 권력을 만든다. 우리나라 언론의 영향력은 보수와 진보가 8대 2 정도다. 그것이 5 대 5가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언론 권력의 교체다.

인터넷의 혁명적 요소들로 인해 시민이 주체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 〈오마이뉴스〉 성공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인터넷의 상호작용성 혹은 쌍방향성이 독자들끼리도 소통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많은 참여가 무조건 더 많은 민주적 공론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46) 오연호, 『대한민국 특산품 오마이뉴스』 (서울: 휴머니스트, 2004), 332-333쪽.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하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참여가 중요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참여, 책임 있는 참여, 연대하는 참여, 대안 있는 참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시민참여 저널리즘이다. <오마이뉴스>가 10만인클럽의 회원을 모으면서 단순히 1만 원씩 내는 회원을 모집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교육을 통해 시민기자를 육성한 것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욕을 쫓는 언론재벌, 언론권력을 개혁시켜나가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정권의 창출이라는 힘든 과정을 수반한다. 점진적 개혁의 차원에서 대안언론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적인 길일 것이다.

V. 나가는 말

언론의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의 언론의 현실은 비관적이다. 언론의 기나긴 오욕의 역사를 차치하고서라도, 최근 ‘대선 부정’, ‘세월호 참사’, ‘국정원 해킹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에서 시민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정보의 은폐, 왜곡보도, 편향보도, 오보, 공정성의 등 불신의 총체성이었다. 수구 언론의 파워 엘리트 중심적인, 국가나 정부 등 정치영역 중심의, 전문직업적이고 무미건조한 매너리즘에 치우친 보도시각은 언론이 외면당하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해왔다. 그리하여 엘리숍(Nina Elisoph)의 말대로 중앙집중화된 거대하고 복잡한 언론권력체제에 대해 개인은 무력감을 느끼고 점점 더 정치문제에 발언하길 회피하게 되면서 냉소적으로 되었던 것이다.⁴⁷⁾ 나아가 시민들은 친자본적이고 파워 엘리트에 초점을 맞춘 언론

47) Nina Elisoph, ““Close to Home”: The Work of Avoiding Politics,” in *Cultural Sociology*, Lyn Spillman, ed. (Mass.: Blackwell Publishers, 2002), 130-140쪽 참고.

이 제공하는 단편적 정보의 수동적 소비자에 그치면서 공론장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출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적 문제들에 대해선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소시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⁴⁸⁾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는다. 공중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한 시민, 즉 비판력을 상실한 대중으로의 전락은 공론장의 기능이 붕괴된 제도 언론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언론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한 규범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런 모색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목한 것은 ‘옳음’의 윤리와 ‘좋은’의 윤리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옳음의 윤리가 작동되는 언론은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즉 언론의 실천규칙 또는 제도적 장치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반면, 좋은의 윤리가 작동되는 언론은 보도내용의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좋음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론의 신뢰는 옳은 언론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좋은 언론으로서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가치를 수행해 나가는 것에서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의 언론이 걸어 온 길을 경험적으로 보면 주류적인 언론 권력에서 어떤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기란 매우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대안언론의 현실도 그리 녹녹치는 않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조금 더 나은 현실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독교의 언론수용자적 실천을 제안해 본다. 시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공론장이 담보되는 시민사회를 위해 교회는 시민사회와 학계와 더불어 꾸준히 언론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항 담론 그리고

48) Craig Calhoun, "Populist politics, communication media and large scale societal integration," *Sociological Theory*, 6(Fall) 1988, 219-241쪽 참고.

보다 개입적인 진단과 비판을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이름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다. 교회는 자신의 권위주의적 소통구조를 스스로 해체하고 힘없는 자들을 굴종의 위치에서 주체적 위치로 해방시키는 충실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팎의 사회구성원들을 의사소통의 동등한 주체로 존중하며 이를 토대로 왜곡된 공론장을 해방시키는 밑일이 되어야 한다. 민주적이고 해방적인 공론장 역할을 하는 언론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시민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언론개혁 운동과 기독교사회운동은 시민사회운동과 연대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교회와 시민사회는 공론장을 지키다가 희생당한 해직 언론인들이나 그들이 중심이 된 독립 언론이나 대안 언론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필요성과 요건들에 주목하고 결집된 노력을 도출해내기 위해, 미시적인 문화실천의 역량들을 저널리즘과 공론장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하는 일에 상당 부분 집중시킬 수 있는 노력과 동력이 요구된다. 미디어 비평 교육이나 언론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단체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언론의 역할에 대한 앞의 추구와 더불어 비판적인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계속 알리고 전파하는 결집된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적 대안언론 운동을 주도해온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협회(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의 활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WACC는 현대 대중매체가 이미 권력화 되어 있기에 민중들은 매체 권력의 희생자이며 갈수록 소외되고 있기에 이런 경향을 전복하기 위해서 매체의 민주화가 필요하고, 민중이 통제하고 말할 수

있는 대안적 매체의 사용을 포함해 공동체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커뮤니케이션 운동을 이끌어왔다.⁴⁹⁾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위하여 탈집중화, 복수성, 다양성, 지방화, 참여와 접근을 통한 민중 중심, 수평적 쌍방향 흐름에 의한 상호 작용성, 인권과 정의의 옹호, 자유화와 민주화, 고유 문화의 존엄과 재창조, 제3세계에 대한 우선적 배려, 언론인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복음에 상응하는 핵심적인 가치로 옹호하고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위해 WACC는 가능한 모든 운동을 지원하고 세계 교회가 동참할 것을 호소해왔다.⁵⁰⁾

냉철하게 보았을 때, 생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 현실에서, 혼탁하고 무기력한 저널리즘의 위상, 그리고 극도로 선정적인 황색 저널리즘의 언어가 현실 구성력과 의제 선점의 효과를 강하게 발현하고 있는 현재의 국면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권력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권력에 의한 자율적 공론장이나 의사소통적 공론장 조성을 낙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냉소적이고 무기력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에 암운은 더욱 길게 드리워질 것이다. 대안과 희망을 즉각 떠

49) WACC는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서의 기독교적 의사소통이 드러내야 하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그것은 공동체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이다. 즉 그것은 갈등, 소외, 분열을 넘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둘째, 그것은 참여적인 의사소통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접근, 참여 및 상방향의 과정으로 민중의 소외되지 않고 주체가 되며, 표현의 자유는 물론 정보의 추구·수용·전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과 전문가의 지배 구조에 도전하는 의사소통이어야 한다. 셋째, 그것은 해방적 의사소통이어야 한다.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의 지배 체계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여,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며 인권을 신장하는 사회구조를 구현해야 한다. 넷째, 그것은 문화를 창조하는 의사소통이다.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민족문화의 자주성을 옹호해야 한다. 즉 서구 문화제국주의의 견제하며 향락산업과 오락 매체를 경계해야 함을 말한다. 다섯째, 그것은 예언자적 의사소통이어야 한다. 즉 언행일치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부정의한 권력에 도전하여 회생을 감수해야 하며, 허위의식에 도전하고 진리에 봉사하며, 확고한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말한다. WACC, *Statements on Communication*, 기독교방송 편, 『기독교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0-30쪽 참고.

50) Ibid., 111-123쪽 참고.

올리기 쉽지는 않지만,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양심들의 연대와 현실의 공고한 벽 앞에서 쉽사리 포기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비판적 의지와 결합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는 지금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 Calhoun, Craig. "Populist politics, communication media and large scale societal integration." *Sociological Theory* 6(Fall) 1988.
- Elisoph, Nina. "'Close to Home': The Work of Avoiding Politics," in *Cultural Sociology*, Lyn Spillman, ed. Mass.: Blackwell Publishers, 2002.
- Eurich, Claus. "Gegen - oder Komplementär? Zu Gegenstand, Funktion und Ursache 'Alternativer' Kommunikation," in Otfried Jarren(Hrsg.), *Stadtteilzeitung und lokale Kommunikation*, München: Saur, 1983.
- Eurich, Claus. *Kommunikative Partizipation und partizipatorische Kommunikationsforschung*. Frankfurt: R. G. Fischer, 1980.
- Friedland, Lewis. "Public Journalism and the New Information Commons." 부산경남언론학회. 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공동주최, "공공저널리즘과 미국의 지역 언론" 학술토론회 발표문, 2001. 6. 7.
- Habermas, Jürgen.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1992). 한상진 · 박영도 공역.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서울: 나남, 2002.
- _____.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Frankfurt: Suhrkamp Verlag, 1962.
- _____.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I, II. Frankfurt: Suhrkamp, 1981.
- _____. *Theorie und Praxis*. Frankfurt: Suhrkamp, 1971.
- Negt, Oskar Reinhard, & Kluge, Alexander. *Öffentlichkeit und Erfahrung: Zur Organisationsanalyse von bürgerlicher und proletarischer Öffentlichkeit*. Frankfurt: Suhrkamp, 1972.
- Peters, John Durham. "Distrust of Representation: Habermas on the Public Sphere." *Media, Culture and Society*. vol. 15(1993).
- WACC. *Statements on Communication*. 기독교방송 편. 『기독교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Weichler, Kurt. *Die anderen Medien: Theorie und Praxis alternativer Kommunikation*. Berlin: Vistas, 1987.

www.law.go.kr

www.law.go.kr/법령/%20방송법

김서중. “세월호 참사 보도의 참혹함은 예정된 것.” 『황해문화』 2014년 가을호.

김서중. “종편-특혜, 특혜, 특혜.” 『황해문화』 2011년 봄호.

김영옥 · 김광호. 『뉴스미디어의 미래: 델파이 조사와 시나리오 기법을 통한 탐색』.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민동기 · 김용민.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서울: 휴먼큐브, 2015.

민주언론시민연합. “거짓방송이 아이들을 죽였다.” 『시민과 언론』 17호. 세월호 특별판. 2014. 5. 28.

선우현. 『사회비판과 정치적 실천: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서울: 백의, 1999.

송건호 외. 『한국언론 바로보기 100년』. 서울: 다섯수레, 2012.

심영섭. “방송법 제4조 제4항의 편성규약 제정의무의 실효성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8권 3호, 2010.

오동석. “공공부문과 민주법학: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접근.” 『민주법학』 23호, 2003.

오연호. 『대한민국 특산품 오마이뉴스』. 서울: 휴머니스트, 2004.

원희영 · 윤석민.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제18대 대통령 선거보도 프로그램의 정량적 및 정성적 편향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29-1, 2015.

유영주. “종편 도입과 특혜.” 『진보평론』 제49호, 2011년 가을호.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5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4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이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과 맞물려 접근할 것을 주장하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한국 언론이 지향해야 할 규범적인 측면을 탐색해보려는 목적을 가진다.

우선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언론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한국 언론의 신뢰 상실의 현상을 공론장의 붕괴라는 맥락에서 고찰한다. 언론의 신뢰상실은 반드시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맥락과 연관해서 조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전개 속에서 언론이 어떻게 공론장의 기능을 상실해왔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난후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언론이 신뢰 회복을 위해 지향해야 할 공론장의 확보를 규범적으로 숙고한다. 이를 위해 주목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옳음’의 윤리와 공공선적 가치수행을 중시하는 ‘좋은’의 윤리이다. 이러한 ‘옳음’과 ‘좋은’의 규범성에 기초하여 각각 하버마스의 공론장과 대안언론의 공론장 이론을 논의하고 그것에 기초해 한국의 언론회복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모색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시대에 역행하여 매우 비민주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한국 언론의 신뢰 회복 즉 공론장 회복의 길은 ‘좋은’의 규범성에 더 무게를 두고 대안언론의 공론장에 주목할 필요성이 더 요청됨을 주장한다.

주제어: 언론, 신뢰상실, 하버마스, 공론장, 대안언론
